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4개 단체 수사 의뢰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4개 단체 수사 의뢰

경기도민 71%, “대북전단 살포 중단해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오늘(24일) 발표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도민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1%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2%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59%가 '위험이 된다'고 답했고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였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1%가 동의하지 않는다(별로 38%·전혀 23%)고 답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는 60%가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충돌 가능성이 작다'는 응답은 33%였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잘했다', 17%는 '잘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등 북한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경기 도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19~20일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83%p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이재명, "북측 군사조치 보류 환영...평화를 만드는 과정 인내 필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북측이 대남 군사조치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북측의 조치 보류와 남측의 인내가 평화협력의 새 토대가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진정한 안보는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고 남북관계 악화는 결국 남과 북 모두의 손실로 귀결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과정은 인내를 요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는 취임이후 출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도 최고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최근 남북관계 악화를 빌미로 가해지는 반평화 공세에도 잘 견디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주한미군 방위비 민상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모습은 칭찬받아 미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한반도의 운명은 한반도의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외세와 강대국에 휘둘러온 비극의 역사를 끝내고 우리 손으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회는 가장 빠른 시기에 4.27판문점선언을 비준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입법해야 하며, 합의에 반하는 대북전단을 철저히 통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이재명, 파주 대북전단 살포 주장단체 긴급수사 지시



이재명 경기지사 는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특별사법경찰단에 지시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지사가 오늘(24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며 "관련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특사경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관련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당 단체의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풀리한숙), 콘센(대표 박정우),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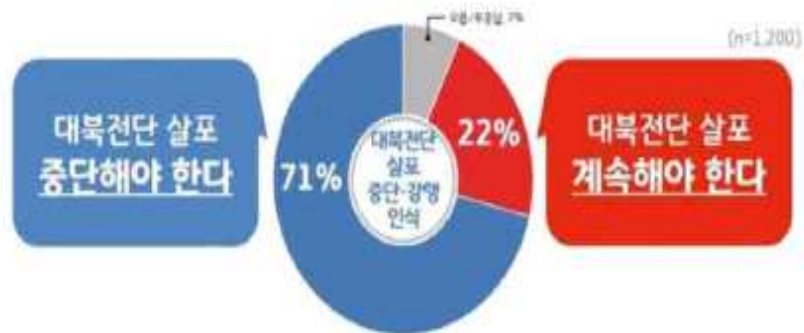
경기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가 수사 의뢰한 4개 단체 가운데 하나인 '순교자의 소리'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 메시지나 선전물을 절대 보내지 않았다"며 "북한에서 출판되고,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다고 북한헌법에 명시된 조선어 성경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경기도민 71% "대북전단 살포 중단해야"



경기도 제공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오늘(24일) 도민 여론조사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71%,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2%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가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묻는 항목에는 59%가 '위협이 된다'고 답했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였습니다.

이밖에도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 포인트입니다.

조희형 기자 (joyhyeong@mbc.co.kr)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 수사 개시" ...경기도 특사경 내사 착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즉시 수사에 들어가라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등이 도내 위험구역 안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했는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행정명령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 입건과 제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어제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단체를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요청했습니다.

홍의표 기자 (euypy@mbc.co.kr)

경기도민 71% "대북전단 살포 중단해야"



경기도가 실시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도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59%가 '위험이 된다'고 답했고,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60%가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으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77%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북측 대남 군사 조치 보류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북측의 대남 군사조치 보류와 남측의 인내가 평화 협력의 새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대적 공세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목적으로서도 보류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평화에 대한 노력과 인내심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특사경,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 수사 착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탈북민단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어제(22일)밤 파주시 월롱면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파주와 포천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7명 대북전단 살포 중단해야"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오늘(24일) 발표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도민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1%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2%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묻는 항목에는 59%가 '위협이 된다'고 답했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였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1%가 동의하지 않는다(별보 38%-전혀 23%)고 답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는 60%가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충돌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33%였습니다.

도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한 것에 대해선 77%가 '잘했다', 17%는 '잘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등 육한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의 대북전단 살포 봉쇄를 위한 향후 대책 방향에 대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은 85%,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였습니다.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선 25%가 '더 나빠질 것', 21%는 '더 나아질 것', 50%는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직후 조사한 남북관계 전망('지금보다 나아질 것' 73%, '지금과 비슷할 것' 18%, '지금보다 나빠질 것' 4%)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체에 의뢰해 도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19~20일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83%p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경기도 특사경,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이재명 "관용 없어"



경기도 특별서법검찰단(특사경)이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해 수사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오늘(24일) "이재명 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 없다'며 특사경에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우선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막상화 대표를 중심으로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내시에 착수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며, 살포한 대북전단 중선은 23일 오전 강원 통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파주, 포천, 김포, 고양, 연천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이 금지됐습니다.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됩니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형사 입건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와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분선, 북한동포적협동기운 등 대북홍산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경기 특사경,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 착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탈북민 단체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사경은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등이 경기도 행정명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며,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은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파주와 포천, 김포, 고양, 연천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지면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형사 입건이 가능하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경기] 경기 특사경,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 착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탈북민 단체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사경은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등이 경기도 행정명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며,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은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파주와 포천, 김포, 고양, 연천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지면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형사 입건이 가능하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이재명 "북측 조치 '환영'...4.27 판문점선언 조 기 비준해야"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문재인정부의 평화에 대한 노력과 인내심에도 경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북측의 대남 군사조치 모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역사의 주체는 남과 북으로 북측의 군사 조치 모두와 남측의 인내가 평화 협력의 새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정부의 평화에 대한 노력과 인내심에도 경의를 표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는 취임이후 줄곧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도 최고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이 점은 미국의 강경과 불탄의 차서전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남북관계 악화를 발미로 가해지는 반평화 공세에도 잘 견디고 있고 터무니 없는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남북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회의 4.27 판문점선언 조기 비준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합의에 반하는 대북전단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책임 추궁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의 운명은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외세와 강대국에 휘둘러온 비극의 역사를 끝내고 우리 손으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주요 뉴스]경기도민 71% "대북전단 살포 중단해야"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 경기도 법인 지방소득세 작년보다 30% 감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에 경기도 각 시군의 올해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징수목표액 1조6천197억원의 95.42% 규모인 1조5천455억원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 보다 6천여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기업의 실적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 광명시, 100ℓ 종량제봉투 없애기로... 환경미화원 부상 방지

경기도 광명시가 100ℓ짜리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00ℓ짜리 종량제봉투는 25kg까지 담도록 돼 있지만 쓰레기를 압축해 담으면 40kg에 육박해 환경미화원들이 다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광명시는 대신 75ℓ짜리 종량제봉투를 새로 만들어 다음 달부터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 경기도, 안성의료원에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설치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격리병상 15개를 설치해, 7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내에는 현재 7개 국가지정 격리병상 병원과 종합병원에 19개 중환자 병상이 있으며, 이 가운데 18개 병상을 사용 중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에는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정한 수도권2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민 71% "대북전단 살포 중단해야"

경기도가 실시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도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59%가 '위협이 된다'고 답했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60%가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으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77%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sygod@cbs.co.kr

이재명,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긴급 수사' 지시

경기도 특사경, '천단살포' 등 행정명령 위반사실 여부 내사 착수

[CBG노컷뉴스 편여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지시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도민과 생명과 안전을 돈독히 수호하도록 활동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 관련단체의 천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관련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당 단체의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사실 여부에 대해 내사단계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군무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현역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법령'을 골라 11월 30일까지 발효할 바 있다.



파주시 파은 대북전단 살포 공선 중첩서 발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행정명령 발효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주보,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해당 단체의 천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들은 도의 행정명령 위반자로 특사경에 의한 형사입건이 가능하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제1회 및 판정관리기공명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8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윤리현숙), 근생(대표 박정우), 북한노동혁신동맹(대표 대북동선단 대표 이연복)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혐의의 이를 막으려는 공공리에 저해해 우려를 가해왔다고 압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차해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민 71% "대북전단 살포 중단해야"

85% '대북전단 살포 금지 유지 또는 강화해야'



경기도청 모습 <사진 출처 = 경기도>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도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2%에 그쳤습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61%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도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가 '잘했다'는 평가를 보였습니다.

앞서 도는 이달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천·포천·파주·김포·고양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도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현재 수준 유지' 44% ▲'더 강화' 41%로 '유지·강화'에 대한 의견이 85%인 반면,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1천200명 대상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83%p입니다.

홍성민 hsm@ifm.kr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 긴급 수사 지시"...도특사경 내사 착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출처 = 경기도>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오늘(24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며 "관련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관련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당 단체의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해 내사단계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파주시 월종면 덕문리에서 경찰의 감시를 피해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들은 도의 행정명령이 발효된 파주시에서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행정명령 위반자가 됩니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특사경에 의한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습니다.

홍성민 hsm@ifm.kr

통일부 “北으로 간 전단 없다” 박상학 “대부분 넘어갔다”

강철환씨 등 대북활동가들
“풍향·남북관계 고려 안한
무차별 살포는 정당성 훼손”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살포한 대북 전단 중 일부는 23일 오전 강원 홍천군 마곡리 야산에서 발견됐다. 이 단체는 홍천에서 70km 떨어진 파주에서 대북 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2000장 등을 북쪽으로 날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날 “박상학 대표가 살포한 대북 전단 및 물품 중 실제 북측으로 넘어간 것은 없다”고 했다. 홍천에서 발견된 대북 전단에서 박 대표가 살포했다고 주장한 소책자나 달러 지폐, SD카드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들어 “정확상 신뢰도가 낮다”고 했다. 이어 “(박 대표가) 풍선 1개를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헬륨가스를 구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박 대표가 날린 대형 풍선이 20개가 아니라 1개라는 것이다. 통일부는 “허위 사실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한 데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박 대표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강원도 홍천에 떨어진 건 일부고 대부분은 북한으로 날아갔다”며 “우리도 변호인단을 조직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다.

일부에선 박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풍향이나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으로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풍향이나 현재의 악화된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밀어붙이기식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국민감정을 악화시키고 북한 주민에 정보 제공이라는 대북 전단의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사전에 전단 살포를 예고하는 방식도 문제로 거론됐다. 대북 전단의 원조인 ‘대북풍선단’의 이민복 대표는 “공개 전단 살포는 남북 관계를 긴장시키고 집경 지역 주민들을 불안케 할 뿐 아니라 조용히 대북 전단을 뿌리는 단체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자승자박 행위”라고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 같은 전단 살포 방식 때문에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경찰·주민 등과 수차례 갈등을 빚었다. 이들의 공개적인 전단 살포 행위가 후원금 때문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이민복 대표는 “박상학 대표가 대북 전단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명성 기자

코로나처럼... '전단은 위법' 재난문자 쏜 경기도

재난문자로 습득 신고 안내 발송
정치권 "정치 사안이 재난이나"
대북풍선단 대표는 "불신" 경고

달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2일 기습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정부는 23일 총력 대응에 나섰다. 통일부는 "깊은 유감" "강력 대응"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모든 행정력·공권력을 동원, 대북 전단 살포를 엄단하겠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이적(利敵) 행위'로 규정했다.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는 '위법'이라는 내용의 '안전 재난 문자'까지 발송했다.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는 가운데 달북 단체들은 '불신(不身)'을 언급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통일부는 이날 "바상파 측이 대북 전단 살포 시도를 지속하고, 허위 사실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며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권을 위협한 데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 등) 관계 기관은 박상파 측 사무실·주거지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박 대표를 사실상 '피의자'로 판단, 검정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제령 경기지사도 이날 달북민 단체

4곳을 사기, 자금유출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는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방 등 3단체에 대해 법인 검찰에 가 취소와 수사 의뢰, 고발 등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북한 인권 운동을 방자, 남북 갈등을 조장해 이익을 보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다"며 "이는 진정한 반국가적 행위가기 때문에 '불은 자급'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날 주무 코로나 정보 등에 쓰는 '재난 문자'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는 위법"이라며 습득 신고 안내를 했다. 정치권에선 "경기도가 정치 사안인 전단 문제까지 '재난'으로 취급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는 재난 상황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경원청 보안수사대에서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서울청 보안수사대 병합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청 보안부장을 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수사 인력 40명을 투입했다. 경기외청무경합서도 최근 의정부 산곡동의 한 주택가에 떨어진 대북 전단 신고와 관련, 재물 손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는 경기 포천 시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불신해서라도 경종을 울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 부지 세습 경력이 있는 한 도발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며 "불신은 남한 민주부사만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도 "(문재인 정권은) 잔인한 가해자·위선자재권 그토록 비굴하면서 약자이고 피해자인 달북민들에게 악대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입에 재갈 물리고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하려 한다"고 했다. 우리 정



23일 경남에 강원도 통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아산에 떨어진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을 수거하고 있다. 22일 밤 떨어진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파주에서 남풍 풍선이 7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날 수거된 길이 3m짜리 풍선에는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었다.

부를 '종북 좌반 독재 정권'으로 부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북한 황해남도 봉화시에선 북한 군인들이 대남 확성기에 달걀을 띄우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20곳 이상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에 위장막을 씌워 조건만

방송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23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25일부터 서울간중·서부전선 최전방 지역 4곳에서 풍선·드론을 사용해 대남 전단을 날려보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원선우·이기우 기자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한밤 기습살포, 북한 대응 뭘까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정찰수색 피해 50만장 뿌려
파주시 띄워, 일부 흥원 야산서 발견"

통일부 "북한까진 안 갔다"면서도
"박 대표 사무실 주까지 단속하겠다"
경기도 수사 회의, 경찰 "실수 수사"

북한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된 가
운데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
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과 군 인력이 발
연에 나섰다.

23일 밤에 열린 북한 자유북한운동연
합이 따르면 이 단체 회원 6명은 지난
22일 오후 11~12시 사이 경기도 파주시
영평면 덕마리에서 '5·25 화살의 진포'
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 장을 살

포 한 뒤 대령 동선에 따라 육안으로 살포
했다. 대령 전단 외에 '김씨 품 뒤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과 150원 지폐
2000원 영수증 1000개도 함께 보냈다.
이 단체는 한밤 살포 정연용 통영시도
로 뛰어 공개했다. 앞서 이날 25일 전주
로 대북 전단 100만 장은 신포항 개항하
고 공개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정찰 수색을 피하는 데에 대한 실패
에 능숙하지 않은 정연용을 고육에 전
단을 보냈다"며 "수소기스를 구하지 못
해 상대적으로 미연 정연용기스를 사 대
륙 전단을 살포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
는 "한 정연용" 개인인 개척자에게 비
공화에서 약자인 탈북민에게만 대북 전
단을 살포하고 국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
유까지 박탈되고 있다. 여기에 서민연가
평안연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띄운 문신 등 하나
3만 5천 장 정도는 정연용 서민 연가
연고 마흔에서 발견됐다. 북한 인근의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문신과 한민용 주
안서 정연용 정연용에 신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박 대표의 주장
과 달리 북측 지역으로 이동한 전단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 전단 100개를 이용해 전단 50만 장
을 살포했다는 박 대표 측 주장은 정연
용 살포도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와 경찰에 따르면 박 대
표 측이 준비한 구해수색, 20~30일 통
합 경찰이 수소기스 압수 조처 등 여러
실황을 감안할 때 통상 한 개월 부양명
정찰수색을 확보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변연된 문신 외에 북측 지역으로 이동한
문신과 전단은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그러면서도 "관계기관은 박상학 대표 측
사무실 주까지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고 필요한 모든 조처를 강구할 예
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유북
한운동연합·순교자의 소리·근심·북한
동포지원회·순교자의 소리·근심·북한
동포지원회·순교자의 소리·근심·북한
동포지원회 등 4개
단체 전단 살포 단계를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과 경기북부
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들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위한 인연물 등으로 위장해 비
용을 후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체
의 운영에 활용한다는 의혹이 있다"
며 "이는 행방불명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
가 있고 후원금 용도가 불법행위 등에
관 유용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의 서민연가는 자유북한운동

연합 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원 실행 하
가 취소와 수사유지, 고발 등을 요청했
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할 입장이라
고 한다.
이 같은 정부-지자체의 강박 대응 입
장은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지난 주
일 대남 전단 100만 장과 통신 300개
를 준비했다고 큰 실로 자랑하고 주장하
였다. 이런 전단 살포로 북한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의 대북 지원에
노력하면서 남북한이 바라 경쟁의 격화
속으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도 나온다. 다만 북한은 23일 오후 현재
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
다고 한다.

www.ajunews.com

탈북민단체 "50만장 뿌렸다"는데... 정부 "북에 안떨어졌다"

정찰수색 피해 50만장 뿌려
파주시 띄워, 일부 흥원 야산서 발견
정부 "긴장 고조 행위 엄정 조치"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2일 대북전단 50만장을 기습 살포했다
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단
을 살포하는 데 필요한 대령 동선 30개
를 준비 보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이
들이 실재로 날린 건 1개이며 그나마 북
한 지역으로 넘어가지도 않았다고 보고
이들 우리 정부에 알보했다. 우리 정부
는 이들이 전단 살포 행위를 계속하고
하위사실로 남북 긴장까지 높이고 있다
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3일 밤 11~
12시를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1달라미 지폐 2000원, 500원
1000개 장이 담긴 봉투에 '이제'와 '25
5·25 연극살포사' 문구가 적힌 원수지
를 대량 살포했다고 날려 보냈다고 주장
했다. 공개된 영상은 보면 '바나나 돌'
이라는 소리와 함께 대령 동선이 하늘로
날아간다. 강원도 통천 예천에서 이 단
체가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령 동선
1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주장이 정황상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통일부는 "전단을 날리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내역과 지난
22~23일 정황 등을 유권기관이 확인·권
도한 결과 북측으로 넘어간 전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통일 아
산에서 발견된 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날린 유일본 대령 동선이라는 얘기다.
산재 정황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
형 동선 1개를 띄울 수 있는 수준의 정황

기스를 구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
할 정황에 따르면 22일 밤 11시 경기도 파
주에는 북서풍(서북쪽에서 풍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불었고, 자정부터 23일 새
벽 3시까지에는 대령이 분지 않았다. 대령
동선을 띄웠어도 북측으로 넘어가자 사
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통천에서 발견
된 대령 동선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연합 대표가 주장한 1달라미의 지폐와
500원 지폐도 없었다고 통일부는 설명
했다. 국민일보는 박 대표의 해명을 듣
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
락이 닿지 않았다.
통일부는 박 대표 등에 대해 "정연용의
대령장"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자숙적으로 전단 및 물품 살
포를 시도한 데다 하위사실로 남북 긴
장만을 고조시켰기 때문이다. 관여정
노동당 제부부원은 지난 4월과 13일 당
회문을 통해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를 정지시킨 바 있다. 통일부는 "전
체적으로 박 대표 사무실 및 주까지에
대해 강력한 단속할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조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자유북한운
동연합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연용의
법위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수사
를 의뢰하고, 법원 실행 허가 취소를 위
한 원문 개회도 통보한 바 있다. 경기도
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 4곳을 사기 및 자금유용 등의 혐의
로 전단 반 정연용에 수사 의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주장대로 실패
복속으로 넘어간 전단은 없지만, 북한
이 어떤 일을 벌여 실사 언제든 추가 도
안에 나쁜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연용 사정연구는 북한연구센터가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
위를 어떤의 적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에
나설 수 있다"며 "이후 대남전단 살포를
시작하고 대남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재현 기자 ree@kmb.co.kr

www.ajunews.com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50만장 보내” 통일부 “풍향·정황상 신뢰도 낮아”

박상학 “파주서 풍선 20여개 날려”
통일부 “풍선 1개 수준 준비한듯”

홍천서 김정은·김여정 사진 전단 발견
경기도, 대북전단단체 4곳 수사의뢰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정부 저지를 뚫고 22일 밤 11~12시께 북한으로 전 단(베라)을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황상 신뢰도가 낮음” 주장이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기도 또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 4곳을 사기와 자금유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2일 오후 11~12시께 파주시 월동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며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표는 “나는 경찰에서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아마추어인 회원들을 교육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갖고 있던 수소가스도 다 압수당해 17배 비싼 헬륨가스를 구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원 6명이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 용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천장, 에스디(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살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날 오전 10시께 파주에서 동남쪽으로 70km가량 떨어진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근처 야산에서 2~3m 높이의 대북전단 살포용 비닐 풍선이 발견됐다. 강가 나뭇가지에 걸린 풍선 아래쪽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의 사진이 달려 있었다. 박 대표가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소책자와 달러화, 에스디카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통일부



지난 22일 밤 경기도 파주에서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살포용 풍선은 2~3m 높이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기의 사진이 달려 있다. **홍천/연합뉴스**

는 박 대표가 “풍선 1개를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헬륨가스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박 대표 쪽이 허위사실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협한 데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품 구매 내역과 풍향 등을 봤을 때 박 대표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보는 셈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순교자의 소리(대표 풀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이상 서울 소재)과 북한동포사업집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경기 소재)을 서

울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법인 설립 허가 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며 통일부와 서울시에 3개 단체의 법인 취소와 보조금 환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선의의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단 내용이 저열하고 상대를 모욕할 뿐 북한의 인권 개선에 전연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경민 홍천의 박수혁 이재훈 기자 maris@hani.co.kr

대북전단 살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처벌할 수 있나

통일부, 경찰에 대북전단 수사의뢰
미승인 반출은 3년 이하 징역 벌금
과거적용사례없고 법조계도 부정적
이재명 '자금출처 불분명, 수사물'
정치권도 탈북민단체 압박 계속

정부의 강력한 자체 요청에도 또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잇따르면서 향후 경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도 전담팀을 꾸리는 등 진즉 버리고 있지만 내부에선 고심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그간 대북전단을 날렸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대북전단과 소책자 등을 대량 송신에 매달거나 쓸을 담은 팩트병을 바다물에 띄워 북으로 보낸 탈북민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 11일 탈북민 출신 박사학씨와 그의

동생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 운동연합'과 '큰샘 2곳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서울경찰청에 전달한 데 이어 이날이 채병 경기도지사도 탈북민단체 4곳에 대해 사기자금유용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 2곳도 최근 탈북민단체 2곳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동시다발 수사의뢰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40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탈북민단체 회원 2명을 압건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며 "현재는 수사의뢰서와 고발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에 대해 법률 검토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의뢰를 받은 탈북민단체에 적용할 법조는 남북교류 협력법과 관련법, 관리법, 공공안전법 및 형법상 이적 혐의 등이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수사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현행법만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

체인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남북교류협력법(13조 1항)은 북한에 물품을 보낸 경우 사전에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경찰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한 적은 있지만 실제 이 법을 근거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탈북민단체 등이 총 363회에 달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했으나 형사압건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화해 기조를 천명한 만큼 과거 정부와 다른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여론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잇따라 발의하는 등 탈북민단체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정치권 분위기도 경찰 수사의 후조조건이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대북전단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면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탈북단체 한밤 기습 감행... 정부 "유관기관 협력 엄정조치"

자유북한운동연합 전단 살포 파장

www.koreajoongna.net

북한전단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과천시에서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했다고 알리며 한밤 간담이 혼란 그르치고 있다. 이날 살포는 대규모 대남북교류협력법 위반행위(13조 1항) 위반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지휘관 등 7명은 탈북민단체 4곳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남남당도 우려된다. 북한은 폐기 실패 등 반출을 금지하여 이득권을 이룩한다.

●탈북단체 이렇다 할 단 살포
이남 교류협력법(13조 1항) 위반 파장은 전 남 순부 11~12시 파시 발문된 이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길"
경찰 "안전이해를 입간·수사 나설"
경기도지사, 4기 탈북민단체 수사 의뢰
통일부 "비밀영향 표 넘어가전 않아"
초은 풍할 관측 등 따라 준비 백화

북한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뒤 대북은 "경찰이 수사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길"을 살포했다고 "경찰의 수색을 받는 나 대한 위협을 교묘히 전하는 부했다. 수소가스 (1)는 보기 알수없지만 비탄 불꽃이 스물 구 입에 살포했다고 말했다.

이대남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 4명은 13조 1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무단 입국했다. 정부 출범 이래 대북전단 살포 파장은 13조 1항

위반, 13조 1항을 위반한 대북전단 살포했다.
경기도지사, 4기 탈북민단체 수사 의뢰
통일부 "비밀영향 표 넘어가전 않아"
초은 풍할 관측 등 따라 준비 백화

●경북 "북으로 간 것 없어" - 무장 교섭-군비 대응

이대남에 따르면 "나 대북에 구해준 것이 아니라 대북에 고-간담과 함께, 경찰의 출현은 북한 상황을 감안할 때 북측 자력으로 이동한 것만 있는 것만 봐야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통상적 절차에서 발문된 것만 해당될 수 있다는 소책자도 있다. 그러나, 일부는 이렇지 않다.

경찰은 관련조는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알림을 일정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행법령을 찾아
는 일과일 제정했다. 통일부는 "경북 유주
를 표명했다"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
위에 경각심을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개 단체를 연남 유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통일부와 서울시에 발문
부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탈북민단
체들의 후원금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것 등을 지
휘관에게 경계 지시를 발문할 예정이다. 수사의뢰
대상은 4기 탈북민단체 4곳을 총 7기 개
별 4순서로 이 대북을 살포한 단체를 4순
번에 살포한 남남당(남북교류협력법) 등
탈북민단체 4곳이 포함될 수 있다.

●북측, 통할 총 기습 불기며 준비 백화
북측은 남북 교류협력법 13조 1항을 위반
하여 이남 대남북교류협력법(13조 1항) 위

반해 살포한 것만 준비 백화
이다. 대북 기관인 민주노총에 대한 기습
수사로 인해 대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을 위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 법원까지
지원을 요청하고 경찰을 사냥하게 할지라도 군사
수사다. 기습수사는 남남당 이 대북을 대남북
하는 기준이다.

통일부 기습수사로 부각되었을 경우 대남북교류
협력법 13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대북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
되고, 대북의 불발로 대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대남에 따르면 유관기관 기습수사로 대남북교
류협력법 13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 정
정되더라도, 남남당 대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전단 살포 선제차단 실패한 군경... 정부 “北으로 넘어간 것 없다”

대북전단 50만장 ‘행동권 검사팀’

국방부 “민통선 서쪽 지역은 손질 통해
절반 ‘30년용 살포 주량’ 확보할 수도”
말북단에 통신 1개 병참카스 구획한 듯
결기도는 전단 살포 4곳 경찰 수사 범위

12면 **D** 평동중요민사 관계자는 “경남 지역
에서 대체 전단 살포와 관련된 특별
장 명령이 발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 경찰 역시 이날 오전 북 대포가 발사됨을 대
기 문제가 전단 살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군감서는 서울전계수입대에 피격되어 연타
는 일이다. 평동수 2개부 대관인은 장대 보
리원에서 “경남현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 지
역에서는 전단 살포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지 않
도록 점검 중이라고 있다”고 밝혔다. 자위대
현출입통제선에 안전을 살피겠다고 주어진 것은
국무 직역이 아니므로 군 감리를 군사 구역이
아니라는 계급의 일이다. 전단 살포를 전동
선출입통제선이라고도 확인으로 보지 못했다. 가능
성도 있다. 전단은 군 감리 관아에서도 보편되
지 않아서 태호로만 사살을 출현이 어렵다.
북쪽도 관측소로 표지이다. 부검을 검토할 것

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전단 살포 행위를 계속
하지, 차단하겠다”며 “대북 전단 살포 제한 조
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 했다.
다만 전단은 요원함을 일회성이라는 비대전의
수단이 고립되거나 시급과 저급이 된 위험적인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대포와
그의 동행인 비공식 관공 대포가 지난 23일 사
를 주가지로 벗어나지 않았으며, 평동중요민사
계 동선을 남했다고 하지만 문의 전단이 없는
일부만이 고립가스를 띠는 것은 사실일 것일
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전에서는 “행동권 1등 주어진 2개부
하고 동선 1등을 주어진 2개 부가 평동중요민사
소요한 때 서 대포 수량대로 20개의 동선할 것
같다며 200만장이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동선 1개에 해당 수 있는 전단 수는 100~150
만 장 정도에서 요원함을 일회성 행위로 한정
할 것. 또 요원함을 예방이 필요하다는 계급을
피 주장이다. 비례를 공격할 것. 군사적 위협
자리에 자위대 요원함을 일회성 행위로 한정
국감 부검에 40만 장의 동선할 예정이다.

이날 결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4곳을 경
한에 수사 30만장이다. 수사 요원 대포 사격은 지
국역요원현출, 고교로의 소년, 청년, 여성들
포도있을 가능성 대해들이고 있다. 통동부

서울시에는 여론단체에 의한 행인 살포 여가
복소 등도 요원했다.

서울시청경찰청장은 4대형으로 구성된 수사
전단 살포로 동선할 것을 우려로 한 대포 행위를
입건에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남북
교류할 예정, 고립가스를 띠는 대포, 추위로 고립
관아를 들을 우려를 느끼고 수사하고 요원함을 경
합수주대 동선에 수사에 사실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정확
살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동부는 “지난
고립의 동행과 대포를 수사 구대 내역 국을 검
한사와 동행자와 동선할 동행 1개 행에 제하고
핵소로 가능한 동행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고 밝혔다. 또 대포 수사 수순으로 대포가
관아에서 동선할 것을 우려할 수 있는 수단의 정
황가스인 구대할 것으로 결론은 파악했다.

통동부는 “북 대포가 대해 전단 살포 시도를
중세에 그 범위 사실로 남과 개건함을 고조시킨
데 대해 검출 대응을 할” 방침이다. 검동-유출시
자였다. 양부인 국문대학원에 교수는 “북군이
동행전부대 동행 1개 동행은 군사요원에게 동행
전단 살포, 계획을 상반해 전단도 전행에 다
고질수 있다”며 “전단 살포 30만 장에 40만
장만 국문대에 비례할 것이라 부검을 검토한
다 한다”고 밝혔다.

탈북단체 대북전단 기습살포 정부 “깊은 유감…엄정 조치”

경기도, 4곳 수사 의뢰 탈북민단체인 자유북
사기·자금유용 등 혐의 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을 기습 살포하자 경기도
가 단체의 자금유용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공개한 사진과 같은 현수막이 달린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강원 홍천군 서구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박삼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전날 오후 11~12시에 파주시 월릉면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풍선은 경기 파주에서 동남쪽으로 약 70㎞ 떨어진 지점에서 공기가 채워진 채 나뭇가지에 걸린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비닐봉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 인근에 24시간 경비 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경찰은 이날 오전에 해당 파주지역 현장을 조사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기와 자금유용 등 혐의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개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경기도는 “이들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후원금을 받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하는 것과 단체의 돈벌이에 활용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정부가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금지 방침을 밝히고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주형 기자 1stoflee@

매일경제

2020년 06월 24일 (수)

종합 01면

대북전단 50만장 한밤중 기습살포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2일 밤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대형 풍선으로 기습 살포했다. 대북전단을 빌미로 북한이 앞서 예고한 대로 군사적 보복조치를 실행으로 옮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2일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경기도 파주시 월동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 50만장을 대형 풍선 20개에 실어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정부와 경찰은 평항상 풍선 1개만을 띄운 것으로 추정했다. ▶관련기사 A12면

파주/지홍구·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2020년 06월 24일 (수)

정치 12면

대북 전단 막겠다더니... 경찰·지자체 감시망 '구멍'

통일부 "北 건너간 풍선없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23일 탈북민 단체의 살포로 인해 대북전단 감시체계에 큰 허점을 노출하게 됐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예상 살포 지역에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 경기도 역시 지난 17일부터 경기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등 접경 5개 시

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허사로 돌아갔다.

정부의 수사 의뢰로 경찰의 감시를 받아왔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신인 회원들을 한밤중에 투입하면서 감시망을 뚫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박대표 측이 전날 밤 파주에서 띄운 대북전단이 북한 지역으로 이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통일부는 "박상학 측의 준비물자 구매내역, 22~23일의 풍향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북측 지역으로 이동된 전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박상학 측은 경찰이 풍선 부양용 수소가스를 압수하는 등 강화된 단속으로 수소가스 확보가 어려워지자 풍선 1개를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헬륨가스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발견된 풍선 1개가 전부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규욱 기자

대북전단 기습 살포 탈북단체 “또 보낸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2일 경기 파주 일대에서 대량의 대북전단(빠라)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유감을 밝히면서도 정황상 이 주장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3일 “회원 6명이 22일 밤 11-12시경 파주 월동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25 점상의 전살이라는 대북전단 50만 장과 “진짜 용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 방향으로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전단 100만 장을 준비했다”며 “나머지 전단도 시기를 봐서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경찰 등은 박 대표 사무실과 주거지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풍선 1개가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며 “박 대표 측의 준비물자 구매 내역, 풍향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북한으로 이동된 전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의 법인 취소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13조 1항)에서는 대북전단과 지폐, 쌀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에 보낼 때는 사전에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 검토 중이다.

정지은/수원=윤성연 기자 jeoru@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2회 수도권방역대책회의 겸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뒤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 확산에 남북경색까지 文, 6·25 70주년 메시지 고심

국민단합 위기극복 호소할듯

6·25전쟁 70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다. 문 대통령은 6·25를 계기로 어떤 형식어든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변 상황이 간단치 않다.

북한 변수가 없었다면 '평화'에 방점을 찍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같은 평화론이라도 접근을 달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24일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6월 30일 미국 방문 때 워싱턴DC의 한국 전쟁참전기념비에 참배했다. 올해는 전쟁 발발 70주년으로 더욱 각별하다.

문 대통령이 안고 있는 난제는 크게 두 종류다. 코로나19(COVID-19) 상황은 끝날 듯 끝나지 않는다. 장기화 국면에 국민도, 의료진도 지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도 크다. 정부는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마련하며 경제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는 종식 시기도, 충격의 규모도 알 수 없는 수준이어서 불안감을 키운다.

더이상 '변수'가 아니라고 여긴 남북관계에서 리스크가 급격히 커졌다. 남북미 협상이 선순환했다면 70주년 6·25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겠지만 한반도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무엇보다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켰고 우리가 피를 흘리며 싸운 상대인 사실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안전 위기와 경제까지 포함한 '국난'을 극복하자고 호소할 전망이다. 70년 전 한국전쟁의 참상을 이겨냈

듯이 이번에도 국민이 단합해 위기를 이겨내자는 것이다.

국회와 야당에도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원 구성이 미뤄지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테이블조차 열지 못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전시에 준한 위기감을 갖고 경제대책을 마련해왔다. 한달 전인 5월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전시재정' 콘셉트로 대규모 확장재정을 펴기로 했다.

더 큰 관심사는 북한을 향한 입장이다.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정경지 확장기 재설치, 대남전단 살포 예고 등 문 대통령이 일궈온 남북 합의를 풀거품으로 만드는 조치를 연일 취하고 있다. 달래기로 일관할 수 없다는 게 딜레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은 살아있는 역사"라며 당시 참전하고 희생된 국민들을 위로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전쟁상태를 지속할 수 없으며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자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6일 현충일 기념사와 연결된다.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의 사연과 이제는 노인이 된 그 딸이 70년 전 기억처럼 "아빠"라고 쓴 편지가 말하는 것은 뚜렷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원칙과 약속을 지킬 것과 여기서 출발해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뜻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3일 열린 수도권방역대책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 패지를 패용했다.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2609명의 호국영웅을 기억하는 의미로 만든 기념물이다.

김성휘 기자 sunykim@

대북전단 살포 '기습감행' vs '수사 의뢰'... 갈등 확산양상

한국전쟁 70돌 앞두고 긴장고조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당국은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라도 적지는 대북전단 살포 단계 4단계에 따라 시·도(시·군)별 차등 실시할 방침이다. 반면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대립의 상징으로 두고 긴장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대립의 상징으로 두고 긴장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자유국제신문을 대외로는 "각국 20일 오후 11~12시 차기 특수사령부에서 대북전단 살포"라며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대립의 상징으로 두고 긴장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한에 침입하자마자 대북전단 살포를 시작했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한에 침입하자마자 대북전단 살포를 시작했다.

발령단체 "전단 30만장(1달) 2천장 두 대행승선 3회 배달이 부러"

통일부 "향원서 발간 임종대상" 홍지사 "반말어 계속 4곳 수사지파"

통일부 "향원서 발간 임종대상" 홍지사 "반말어 계속 4곳 수사지파"

통일부 "향원서 발간 임종대상" 홍지사 "반말어 계속 4곳 수사지파"

이제는 도지사·자유국제신문장과 송고자의 소리, 간성, 북한으로의 송고자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부처장관명령이 서울특별시장명령에 수사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



북한이 지난 20일 남해에서 남한에 대북전단 살포를 명령하자 남한은 사면 제 제1군, 2군에 발령한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제는 도지사·자유국제신문장과 송고자의 소리, 간성, 북한으로의 송고자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부처장관명령이 서울특별시장명령에 수사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

이제는 도지사·자유국제신문장과 송고자의 소리, 간성, 북한으로의 송고자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부처장관명령이 서울특별시장명령에 수사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

6·25전쟁 70주년 행사 北 도발에 줄줄이 취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올해 70주년을 맞은 6·25전쟁 기념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특히 남북교류의 요충지로서 다양한 남북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경기 북부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대부분 행사를 최소화하며 명맥 잇기에 치중한 모양새다.

파주시는 오는 25일 예정된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를 전격 취소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남북 분단의 최전선인 파주는 올해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특별 기념 공연과 유공자 단체 대규모 초청, 제주도 견학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를 계획했다. 하지만 최근 참전 용사에 파주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행사 계획을 변경했다.

김포시는 오는 25일 김포아트홀

에서 40명 이하의 최소 인원으로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해 진행할 예정이며, 포천시 역시 참전용사 대상 70주년 감사예달 전달식만 진행하는 등 행사를 간소화한다.

또한 연천군은 참전용사 당사자만 초청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코로나 겹쳐 안전 최우선 고려 접경지역 지자체 명맥만 유지

에 근거해 식사 대접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행사 취소를 확정했다.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다시 확산일로를 겪는 코로나19와 더불어 검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행사 강행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접경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현충일까지만 해도 행사를 진행했지

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 등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 6·25전쟁 기념행사 강행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참전용사 및 가족 대부분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이어서 행사를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라며 "당사자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역시 산하 31개 시·군 지부를 상대로 행사 취소 또는 소규모 진행을 권고하고 있다.

참전 유공자회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당사자들에게 연중 가장 큰 행사이자 축제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북한 도발까지 지속돼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지회별로 취소나 축소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참전용사 관계자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문기자

한밤 파주서 기습 살포한 '대북전단' 흥천서 발견

후 지사 관련 단체 4곳 자금유용 혐의 수사 의뢰

발북민단체가 파주에서 기습 살포한 대북전단이 강원 흥천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23일 발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밤 기습 살포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이날 오전 강원 흥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강원 흥천에서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풍기가 채워진 채 하천 인근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대북전단 등이 담긴 비닐봉지도 그대로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이 발견된 위치는 파주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지점이었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11~12시 사이 파주시 월곡면 덕은리에서 대

북전단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측은 "아마추어인 회원들을 교육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갖고 있던 수소가스도 다 압수당해 17대 비싼 헬륨가스를 구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천장, SD카드 1천개를 20개의 대형풍선에 매달아 살포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경기도가 시기자금 유용 등의 혐의를 제기할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소리(대표 풀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 4곳이다.

경기도는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지난 22일 통일부와 서울시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순교자의소리 등 3개 단체 법인설립허가취소 및 수사 의뢰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비등록단체로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요섭·하지르기자

李지사,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 수사의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시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고발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풀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

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시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도는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김수연기자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4개 단체 수사 의뢰

안보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 의심
후원금 용처 불명 형명 의혹도
'큰샘' 등 3곳 법인 취소 요청

자유북한운동연합, 기습 살포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2일 밤 과주사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는 주장과 영상 등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사태파악에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재 사실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시·자치유용 등이 혐의로 지난 22일 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방

경청에 수사의뢰했다.

4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봉사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도는 수사의를뢰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수사의를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형명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경찰 수사의의를뢰의 함께 통일

부의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수사의를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봉사단은 시단법인이 아니라 비등록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는 혐조 공문을 통해 앞서 설명한 수사의를뢰 사유 설명 후 "4대 단체의 활동이 법인설립허가 목적과도 다르므로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법인설립허가취소, 보조금환수, 수사의를뢰 및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북전단 50만장 살포와 관련해 공식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공개한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는 대형에드벌론이 북한으로 실제 넘어갔는지, 몇 개가 살포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며 경찰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현재 확인 중이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명의 회원들이 22일 밤 11~12시를 과주시 월롱면 덕은라에서 6~25 점상의 진성"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 용 단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천장, SD카드 1천개를 20개의 대형에드벌론으로 북한에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 소식을 전하면서 "살포된 대북 전단이 우리 민가에 떨어졌고, 자칫 '살인 부매량'이 될 수 있으며 경찰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매김·김한수기자 90virus@

“대북전단 살포는 돈벌이 때문” 경기도, 4개 단체 수사 의뢰

경기도는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시·자치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봉사단(대표 이민복)이다.

도 관계자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북한 인권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

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수사 의뢰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형명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경찰에 이들 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통일부와 서울시에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수사 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봉사단은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도는 혐조공문을 통해 "4대 단체의 활동에법인설립허가 목적과도 다르므로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2일 오후 10~11시 사이에 과주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됐다. 임하연기자

